

저들의 음험한 반격

한미FTA 반대 집회 참가자 출석 요구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기소
서점 대표 국가보안법 구속

좌파 해산 안 된다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

종로·관악경찰서는 3월 25일 열린 '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 민주노동당 전국 당원 총결기 대회'와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당원들에게 사진 채증을 근거로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다.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민주노동당 강동·관악·광진·성동·동작지역위 소속 당원 10여 명이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며, 대상자가 점점 늘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동당뿐 아니라 '이윤보다 인간을', '동작 공대위' 소속 활동가들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고, 대상자가 1백 명이 넘을 수 있다는 소문도 흘러고 있다.

그러나 3월 25일 범국민대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측에 원천 봉쇄와 상경 차단 등을 하지 말라고 권유한 정당한 집회였다. 그럼에도 경찰은 서울 도심 곳곳에 전경차 수백 대를 배치해 거리 행진을 막고, 곤봉과 방패로 무장한 경찰들 수천 명

우익과 노무현 정부가 우리 운동을 음험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다. 최근 경찰은 한미 FTA 반대 집회 참가자들 수십 명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인터넷 서점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한 것도 우리 운동에 대한 공격의 일부다. '해킹'을 빌미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기소한 것도 마찬가지다(관련 기사 3면을 보시오)

우익과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강행하는 신자유주의 동맹 세력을 강력하게 위협하는 우리 운동의 기세를 꺾으려 한다. 이런 공격에 개별적으로 굴뜨게 대처하다가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운동의 기반이 잠식될 수 있다. 따라서 탄압에 맞서 모두 힘을 합쳐 강력하게 반격하는 게 중요하다.

이 시위대를 위협하며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했다.

노무현 정부는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며 한미FTA 반대 운동을 탄압해 왔다.

전 법무장관인 천정배조차 "한미FTA 반대 집회를 원천 봉쇄하면서 FTA 찬성 여론몰이를 강행하는 이 정부는 유신·5공 시절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지금의 탄압은 한미FTA 협정 체결과 국회 비준을 앞두고 운동의 성장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탄압에 대처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맞서며 한미FTA 체결 저지와 비준 저지 투쟁을 더욱 강력히 건설해야 한다.

류민희

며칠 전 경찰은 인터넷으로 《꽃파는 처녀》, 《민중의 바다》(원제 《피바다》) 등의 북한 책과 중고 사회과학책을 판매한 인터넷 현책방 미르북 대표 김명수 씨를 국가보안법 7조 이적표현물 취득·소지·판매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 씨가 판매한 북한 책 등이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사회주의 혁명 사상을 선전"하는 책이어서 김 씨를 구속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은 북한의 대표적 가극이자 영화여서 북한 당국이 북한을 방문한 남한 정부 관료들에게도 자주 보여 줬다. 국회도서관에도 소장돼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책들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심지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 책

책 읽는 것도 안 된다는 야만적 마녀사냥

들을 구입한 사람 60명의 명단을 압수하고는 구입자들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또한, 경찰은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해방전후사의 인식》, 《철학에세이》, 《제주민중항쟁》, 《러시아혁명사》, 《칼 마르크스 전기》등 책 2백여 권을 '임의 제출'이라며 사실상 압수해 갔다.

이 책들은 과거 군사 정권 때 소위 '이적 표현물'로 판결된 것들이다. 민주화 투쟁 덕분에 이 책들은 사실상 법원이 결정한 '이적 표현물' 목록으로만 남아 있고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에서 흔히 판매될 뿐 아니라 국회도서관에도 소장돼 있다.

우익과 노무현 정부의 공안기관은 한미FTA 운동에 반격을 가하고 대선을 대비해 사회 분위기를 냉랭하게 만들기 위해 군부독재 시절의 잣대를 들이대며 서점과 출판물까지 야만적 마녀사냥을 확대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반격이 시급하다.

조승희

프랑스 대선 평가

프랑스는 우경화하는가?

5면



차베스와 21세기 사회주의

신자유주의에 도전하는 ALBA

4면



한-EU FTA의 신자유주의적 성격

6~7면

나이지리아 한국인 노동자 납치 사건의 배경

7면

기후 변화의 재앙을 저지하자

8면

비정규직 투사에게 듣는 비정규직 억압과 저항

9면

“인용해도 될까요?”

“핵시설 전체를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1천 기를 열흘 동안 퍼부으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수년 전 수준으로 후퇴시킬 수 있을 것”

－ 헤즈볼라에게 패배하고도 정신 못차린 이스라엘 총리 올메르트

일본 총리 아베: “위안부 분들을 매우 곤란한 상황 속에서 쓰러리고 힘든 일을 겪게 한 데 대해 인간으로서 총리로서 마음으로부터 동정하고 있으며 죄송스러운 마음”

조지 부시: “[사과를] 받아들인다. [아베의] 솔직함을 평가한다.”

－ 부시와 아베의 역겨운 짝짜꿍

“입이 찢어지려 한다. 윤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된 고비는 넘었다.”

－ 지지율 소폭 상승마저도 감격스러운 노무현

“나를 그렇게도 못 믿나”

－ 정동영과 만난 뒤 노무현의 한탄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정밀 폭격을 통해 영변의 핵 시설을 파괴하거나 북한 정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및 진전 배치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북 강경 정책의 진수일 것”

－ 자유기업원 부원장 이춘근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공작원을 직접 투입해 각종 파업과 사보타지, FTA 반대 세력의 폭동, 심지어 우파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까지 사주할 가능성도 있다”

－ 경기대 정치학 교수 남주홍

지지와 연대가 가득했던 고려대 출교 1주년 행사

지난 2주 동안 열린 고려대 출교 학생들의 천막 농성 1주년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토론회와 주점, 촛불집회, 기자회견 등에 연인원 8백 명 정도가 참가했다. 특히 후원 주점에는 총 4백 명 이상이 참석했다. 천막 농성 기금과 출교 학생 김지운 수술비 마련을 위한 학내외 모금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출교 철회 천막 농성 1주년 사업단”에는 학생회·동아리·학회·노조 등 35개 학내 단체들이 가입했다. 이 점에서 이번 행사는 진정한 전체 고려대인들의 행사라 할 만했다.

이렇게 규모 있게 행사를 준비하고 홍보한 결과, 많은 고려대 학생들이 출교 문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 학교 당국이 편집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보사도 출교 1주년 보도 기사에서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출교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며 “학교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 한다고 썼다.

많은 학생들이 출교 학생 김지운의 수술비 마련 모금에 참여했다. 고려대 4·18 기념 달리기와 매일 점심 가판에서 모금한 돈이 수십 만 원이나 됐다. 학교 근처 상인회도 모금에 동참했고, 지지의 뜻으로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기도 했다.

불허

5월 5일 개교기념식을 앞두고 학교 측은 이런 학내 분위기가 못마땅했는지 계속 행사를 방해하고 탄압했다. 학내에 부착한 포스터를 하루 만에 떼어 버리기도 했고, 촛불집회 문화제 날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집회 장소 근처의 전원을 차단해 버렸다.

심지어 이진희 박사 학위 수여 반대 시위 2주년 기념 “삼성은 어떻게 한국을 지배하는가?” 토론회가 시작되기 10분 전에 토론회 장소였던 소강당 대여 허가를 취소하기까지 했다. 학교 당국은 “출교 관련 행사는 불허가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의 지지와 참여 덕분에 학교 당국의 이런 훼방은 성공하지 못했다. 장소 불허에 맞서 강당 앞 로비에서 강행한 토론회에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했다.



4월 18일 ‘부당 징계 반대·학생 자치 탄압 반대 시민사회연대’의 기자회견

학교 당국은 이런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고려대 강수돌 교수가 직접 출교생들을 지지하는 연설을 한다는 점 때문에, 결국 두번째 토론회 “시장주의 고려대가 아닌 민주주의 고려대를 찾아서”는 방해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사업단에 함께한 많은 단체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징계자위원회에 연대하는 더 넓은 공동 행동 기구를 만들어 보자는 뜻을 모았다.

1주년을 맞아 학외에서도 출교 학생들에 연대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출교 조처가 내려진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4월 18일에는 ‘부당 징계 반대·학생 자치 탄압 반대 시민사회연대(가)’가 출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교협, 교수노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민주노동당, 대학노조, 공무원노조, 전국학생교육대책위 등 많은 단체들은 앞으로 고려대 출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고려대 졸업생인 이영순·노회찬·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임종인 의원이 출교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당국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큰 자신감과 힘을 얻은 출교 학생들은 앞으로 지지를 더 단단히 결속하면서 계속 힘차게 싸울 것이다.

서범진(고려대 출교생)

‘조폭’ 재벌 김승연 사건이 보여 준 계급 불평등

3월 8일 김승연이 벌인 활극은 ‘조직폭력배’의 소행과 다르지 않다.[실제로 조폭을 동원했음이 드러났다.]

더구나 김승연은 상습범이다. 2005년 3월에도 논현동 고급 주점에서 경호원들을 데리고 술을 마시다가 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종업원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치고 소화기를 난사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런 자들을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폭처법)이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법을 진보적 운동을 탄압하는 데만 악용해 왔다. 작년 한 해 동안 1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농성·집회 과정에서 ‘폭처법’으로 구속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노동자들은 합부로 구속·처벌하는 경찰이 김승연의 진짜 조폭 행각은 “단순 폭행”으로 선처하기 위해 한 달 넘게 사건을 은폐해 온 것이다.

한 인권 운동가는 “만약 평범한 조폭 집단이 이 정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들은 일망타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김승연은 “일망타진”은커녕 2백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영입해 뺑뺑한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역겹게도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해 당했다”며 압력을 넣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도 생색내기였을 뿐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애초부터 “건물 27층 회장실과 부속실에서 문서 위주로 압수수색”하겠다는 내용으로 제한돼 있었다.

반면, 경찰이 시국사건이나 일반 형사 사건을 수사할 때는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하거나 “건물 전체”를 포괄하는 영장을 발부박아 이 잡듯이 뒤진다. 지난해 11월 전남지역에서는 경찰이 ‘한미FTA 시위’와 관련 있다며 한밤중에 전농, 희망연대 등의 사무실 문을 따고 들어가 압수라장으로 만들고 컴퓨터와 문서를 통째로 들고 나갔다.

경찰은 김승연 사건의 공범인 그의 아들이 중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막지 않았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유력한 증인들 — 아들의 고교 동창, 한화 협력업체 사장 등 — 에겐 소환장도 보내지 않아 도피할 시간을 충분히 벌여 줬다.

집회 현장에서 불법으로 채증한 사진

한 장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포괄적 공모 공동정범”으로 몰아 마구잡이 소환·구속하던 그동안의 경찰 관행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검찰총장 정상명은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규정한 대검 훈령(인권보호 수사준칙)이 지켜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왜 김승연 수사에서만 그런 절차를 강조하는가?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계급 분단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재벌 총수들 앞에서 법의 잣대는 엇가락처럼 휘어진다.

김승연을 당장 구속, 엄벌에 처하라.

유청하

“한국의 차베스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재보선 참패 이후 심각하게 치달던 한나라당 내분은 강재섭의 ‘쇄신안’으로 잠시 봉합되는 듯했다. 그러나 전여옥조차 위기와 갈등의 뿌리를 그대로 둔 강재섭의 ‘쇄신안’을 “[이명박·박근혜·강재섭] 그들만의 짬짜미 아합”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과태료 대납’ 부패 사건의 주역인 강재섭이 ‘쇄신’의 주체가 될 순 없는 일이다.

결국 ‘봉합’ 자리에서도 ‘화합 포즈’마저 거부하며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하던 이명박과 박근혜의 갈등은 다시 분출하고 있다.

지금의 위치가 탄탄한 지지가 아니라 반사이익에 기반한 것이라는 데 한나라당 위기의 뿌리가 있다. 드높은 반노무현 정서 속에서 한나라당이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한 ‘착시현상’이 계속돼 왔지만, 거품이 빠지면서 드러난 한나라당의 물결은 보잘것없었다.

사실, 노무현의 개혁 배신과 온갖 개악에 분노한 개혁 열원 대중이 그런 배신과 개악에 언제나 공조해 온 한나라당을 진심으로 지지할 리가 없었다.

부패한 독재 정권의 후예라는 한나라당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거품은 계속 빠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집토끼’(전통적 보수파)에 머물지 말고 ‘산토끼’(중도파)를 잡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생 관계

그러나 ‘산토끼’를 강조하는 이명박과 ‘집토끼’를 강조하는 박근혜의 아귀다툼은 쉽게 해소될 수 없다. 국민대 교수 김형준도 “[이명박과 박근혜] 지지계층이 중첩되지 않는 것은 한나라당의 축복이자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산토끼’를 잡다보면 ‘집토끼’를 놓칠 수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둘 중 하나만 잡아서 대선 승리가 불투명하다. 이것이 한나라당 분란의 배경이다.

다시 중재안을 내겠다는 강재섭도 “양주자측이 중재안을 거부하면 그때는 하느님이나 부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걱정했다. 전여옥은 “정권 교체가 상상 속의 파랑새처럼 눈 앞에서 잡힐 듯하다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 아닌가 싶다”며 절망했다.

그래서 ‘보수진영 선거연합과 후보단일화’ 논의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미FTA 반대 운동의 성과는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분열하더라도 막판 후보 단일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이제 노무현과 열우당이 한나라당의 위기와 분열에서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손잡고 온갖 개악과 배신을 해 왔던 자들이 “반한나라당”을 위해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이다. 서로의 배신과 개악, 부패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어 온 ‘개혁사기꾼’과 ‘차떼기당’은 적대적 공생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차떼기당’의 추악함에 대한 기억을 되살린다고 해서 ‘개혁사기꾼’들의 배신과 개악을 잊게 되는 건 아니다. 노무현은 “입이 찢지려 한다”고 좋아했지만 노무현의 지지율은 여전히 30퍼센트 이하다. 10명이 넘는 ‘범여권’ 후보군의 지지율을 모두 합해도 15퍼센트가 되지 않기에 그나마 노무현이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정운찬 불출마 선언 이후 ‘범여권’의 사분오열은 극단으로 치달고 있다. 당장 친노 계열과 비노·반노 그룹들이 서로 막말을 쏟아내며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근태와 정동영은 탈당을 준비 중이고, 노무현은 “내가 다시 당에 들어가겠다”며 설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중심 통합, 후보 중심 통합, 노무현 중심 통합 등 그 어느 것도 전

망이 불투명하기만 하다. 그 무엇도 정치 양극화와 중도개혁파의 지지기반 붕괴를 메우기 힘들어 보인다.

한편, 한미FTA 반대로 노무현과 선을 그은 김근태와 천정배 그룹은 ‘개혁’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김근태·천정배는 ‘미래구상’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에 함께 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천정배는 “기존 정치권만으로는 안 된다. … 시민사회세력이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포퓰리즘

그러나 천정배는 시민·사회 운동 진영의 지지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범여권 대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한미FTA에 대한 입장 차이가 대통합 신당 참여의 장벽이 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까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개혁 정당”이라고 두둔했다. 포퓰리즘적 정당 열우당의 다계급적 기반 중에서 잃어버린 왼쪽을 되찾으려 하면서도 오른쪽 기반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기성 정치권의 위기와 분열은 커다란 정치적 공백을 낳고 있다. 이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귀영 연구실장은 “한나라당은 싫고, 그렇다고 구여권으로 갈수도 없는 층이 일

부 민주노동당으로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달 사이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한 반면, 지지 정당이 없다는 부동층은 20.2퍼센트에서 28.6퍼센트로 증가했다.

<조선일보> 경제부장 송희영은 사회 양극화 속에 불만에 찬 청년들을 “패잔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부터 누군가 거대한 패잔병 세력을 선동할지도 모른다”며 “한국의 차베스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은 이런 우려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기층 속으로 파고들며 한미FTA 반대 운동을 더욱 대규모로 강력하게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개방적인 자세로 노무현·열우당과 구분되는 급진적 선거·정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FTA 반대 운동의 성과는 잘되면 선거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이 진보진영 선거연합이다. 민주노동당이 반FTA 운동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을 때 이 일에 자신 있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게 유리하다. 지금이 그 때다.

한규한·전지윤

삼성·정부 ‘비리 동맹’의 이영순 의원 탄압

검찰이 지난달 29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이유는 2005년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결함을 폭로하고자 행정전산망에 무단 침입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감에서 이영순 의원은 삼성이 이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채택된 삼성SDS의 시스템에 보안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보안 결함 확인 과정은 해킹으로 볼 수 없다. 임시 아이디로 2~3초간 로그인한 과정에서 패스워드 노출을 확인하고, 이를 영상물로 감사장에서 공개한 것뿐이다.

공개 입찰에서 다른 업체보다 1백15억 원이나 비싼 값을 써내고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제품에 기본적(보안) 결함이 있다면 이를 따져 묻고 문책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적반하장 격으로 행자부는 해킹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하고, 검찰

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소했다.

공익을 위해 정부 전산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해킹”으로 모는 것은 시스템의 보안 결함과 삼성 특혜 의혹을 가리려는 비열한 술책이다.

결국, 검찰의 기소는 삼성·검찰·행정부의 비리 동맹을 파헤치려는 진보정당 의원을 탄압하는 것이다.

이영순 의원도 “삼성을 비호하는 정부와 민주노동당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민주

4월 30일 이영순 의원 기소 규탄 기자회견

노동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저들의 비리를 더욱 파헤치고 공격·항의하며 반격의 화살을 날려야 한다.

김문성



신자유주의에 도전하는 ALBA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를 강행하며 세계화 시대에 자유무역협정(FTA)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이 사실상 파탄났다.

그리고 최근의 제5차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식 대안’(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 America: ALBA) 정상회담에서 베네수엘라·볼리비아·니카라과·쿠바·아이티의 정상들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이런 반(反)신자유주의 흐름에는 라틴아메리카 민중의 거듭된 투쟁뿐 아니라, 각국 자본가들의 이익 다툼 — 예컨대 미국 농산물 시장을 더 많이 차지하기를 원하는 브라질 농업 자본가들의 반발 — 도 중요한 구실을 했다. 하지만 FTAA의 대안으로 ALBA를 주창해 온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의 노력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ALBA는 차베스가 2001년에 처음 제안한 라틴아메리카 통합 구상이다. 2004년 12월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ALBA 협정문에 서명한 것을 계기로 본격화했고, 그 뒤 볼리비아와 니카라과가 가입했다. 에콰도르와 아이티도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가입하지는 않은 상태다.

사회적 필요

ALBA의 자세한 내용과 성격은 2004년 말 차베스와 카스트로가 서명한 협정문을 보면 알 수 있다.

“비교우위”나 “경쟁력” 등을 앞세우는 기존 무역협정들과 달리 ALBA는 베네수엘라와 쿠바의 협력이 “연대의 원칙”과 “양국의 경제적·사회적 필요에 가장 유익하게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원칙”에 바탕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국제 시장 가격보다 싼 가격에 석유를 공급하고 쿠바는 베네수엘라가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1천여 개의 의료시설 설립과 의사 4만 명 육성을 지원했다. 또, 쿠바 의사 3만 명이 베네수엘라에서 무상의료 활동을 벌이고, 쿠바에서 베네수엘라인 10만 명에게 무상 안과 수술을 실시했다.

그리고 쿠바의 교사들이 베네수엘라에 파견돼 베네수엘라인 1백50만 명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등 베네수엘라의 문맹 퇴치와 무상교육을 위해 서로 협력했다.

차베스는 ALBA가 “사회적 관심사”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 라틴아메리카 통합의 유연한 모델이라고 강조했고, 베네수엘라 해외통상은행(Bancoex)도 “ALBA가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반대하는 투쟁을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의 정부는 우리 국민이 양질의 필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와 정부가 정책들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능력

을 제한하는 자유화·규제완화·사유화 과정에 반대한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의 정부는 공공 서비스가 통상과 경제적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ALBA는 신자유주의를 정면으로 거슬러 적어도 케인스주의로 돌아가자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말에 전 세계 주류 경제학의 정설로 득세한 신자유주의와 달리 ALBA는 시장과 기업의 역할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불확실한 시장의 힘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사회 복지를 확대·심화하고, 에너지 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을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하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취약 산업이나 소농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 한다.

더 나아가 ALBA의 어떤 측면은 신자유주의뿐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논리에도 도전한다. 예컨대, “현물 교역”의 가능성을 제도화한 것은 자본주의의 등장 이래 세계를 지배해 온 화폐 기반 교역망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융 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화를 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석유와 의사·교사를 교환하는 것을 두고 마이클 레보위츠는 “사용가치가 교환가치를 압도한 사례”라고 불렀다.

이것은 양국이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토대 위에서 교역과 경제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 되면, 각국이 시장의 가격 등락에 종속되지 않고 저마다 경제적 필요 영역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해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화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은행이나 환투기꾼, 자본가들이 끼여들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 자본 축적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국민들의 절실한 필요가 전면에 부각될 것이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남미 컨센서스

그러나 차베스는 반신자유주의를 넘어 “21세기의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도 자신의 핵심 동맹 세력으로 여기는 브라질의 룰라나 아르헨티나의 키르치네르 정권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곤 한다.

또, 케인스주의 자체는 결코 자본주의라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역사적 경험은 국유화나 국가 통제가 자본주의 시장 논리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오늘날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도 국가 자본, 베네수엘라 민간 자본, 다국적 민간 자본이라는 세 축에 의존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석유·천연가스 산업에 뛰어든 다국적기업이 50개가 넘는다.

차베스가 아르헨티나·브라질과의 파이프라인 합작 사업이 “위싱턴 컨센서스의 종식”과 “남미 컨센서스의 시작”을 뜻한다고 주장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주도 경제 개발과 사회복지 향상은 분명히 위싱턴 컨센서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와 모순된다.

그러나 그것은 차베스가 주창하는 “21세기의 사회주의”에는 아직 많이 모자란다. 국가자본주의와 사회복지 개혁은 세계 경제 호황기 동안에는 투쟁이 따른다면 노동자와 빈민의 생활조건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불황기에는 이런 개혁의 성과가 공격받기 십상이다.

국가는 개혁을 선사하고 대중의 생활조건을 개선할 수 있지만 그 개혁의 성과

를 도로 가져갈 수도 있다. 그리고 국내 자본가들의 반발 때문이든 제국주의 외세의 개입 때문이든 그런 개혁이 공격당할 때 국가는 기껏해야 변변찮은 방어막 구실을 했을 뿐임을 역사는 보여 준다. 최악의 경우에는 국가가 다국적기업들과 손잡고 그런 공격에 가담해서 대중의 생활조건을 오히려 악화시킨다.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는 이제 “아래로부터 ALBA를 건설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간 협정뿐 아니라 각국의 노동자·농민 등 직접 생산자들 사이의 교역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제5차 ALBA 정상회담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이 온두라스·페루·엘살바도르·칠레·쿠바 등지의 사회운동 지도자들을 만나 ALBA 각료회의, ALBA 정상회의와 함께 ALBA 사회운동회의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것은 ALBA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층의 사회운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금 ALBA는 베네수엘라에서 진행중인 각종 사회 개혁 조치들과 동의어로서, 라틴아메리카의 급진 사회 변혁 염원의 상징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대중적 염망에 공감함과 동시에 충실히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구축해야 한다. 국가가 위로부터 사회 개혁을 대중에게 선사하는 것과 대중이 자주적 행동으로 그런 개혁을 쟁취하는 것,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독자적 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결정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개혁이 대중의 자주적 행동을 바탕으로 쟁취한 것일 때만 그런 개혁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형성된다. 그리고 진정한 권력이 직접 생산자들에게 있는 새로운 사회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이수현

4월 30일 제5차 ALBA 정상회담에 참석한 라틴아메리카 정상들

—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쿠바 부통령 리카르도 라게, 차베스,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아이티의 프레발(왼쪽부터)

사르코지 정부에 맞선 투쟁은 이미 시작됐다

프랑스 대선 1·2차 투표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에서 정치적 대안이 중요함을 보여 줬다. 2005년 유럽헌법 국민투표 부결, 2006년 CPE(최초고용계약법) 반대 투쟁에서 승리한 반신자유주의 진영은 운동의 성과를 반영하고 확대할 정치적 대표체가 필요했다. 그러나 대안적 정치세력화의 꿈은 씁쓸한 선거 결과로 막을 내렸다.

물론 1차 투표에서 LCR(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이 거둔 성과(4.08퍼센트)는 분명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대중운동이 1995년 이후 세 차례 중요한 승리를 거뒀는데도 우파가 17년 연속 집권하는 모순도 여전하다.

주류 언론들은 대부분 프랑스인들이 우경화해서 우파 후보를 택했다고 말한다. 좌절한 프랑스 민중 일부도 그렇게 생각한다. 교외 빈민가에 사는 폴린느 아멜은 BBC와 인터뷰에서 “기권율이 낮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르코지를 선택했음을 증명한다. 이번 선거는 정당한 선거였고 우리는 우익 국가에 살고 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절반에서 조금 더 많은 표(53.06퍼센트)를 얻었을 뿐이고 거의 절반(46.94퍼센트)의 유권자가 루아얄에게 표를 던졌다.

더구나 사르코지는 당선되자마자 반대 행동에 직면했다. 2차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하자 전국 곳곳에서 반사르코지 시위가 일어났고, 교외 빈민가 청년들이 경찰과 충돌했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정치적 관심이 높더라도 — 2차 투표 참가율이 86퍼센트나 됐다 — 올바른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정치적 지지가 엉뚱한 곳(사르코지)으로 향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줬다. 사르코지는 파시스트인 르펜이 2002년 대선 때 대량 득표한 지역들뿐 아니라 전통적 좌파 지대인 일부 산업 지역에서도 상당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포퓰리즘

1차 투표 이후 사르코지가 포퓰리즘적 면모를 강조한 것도 이런 결과에 한몫했다. 이 점에서 사르코지의 선거운동은 “온정적 보수주의”를 표방한 2000년 부시의 선거운동과 닮았다. 당시 부시는 민주당에 대한 노동계급의 실망을 이용해 일부 노동계급의 표를 획득했다.

사르코지는 르펜의 데마고그를 빌려오고 포퓰리즘적 언어를 구사해서 우파·중도우파 경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르펜 지지자 대부분과 베이루 지지자 40퍼센트의 표를 얻었다.

그러나 2차 투표에서 사르코지의 포퓰리즘적 선거운동이 일부 대중에게 먹혀든 데는 주류 좌파 정당인 사회당의 무능도 한몫했다. 루아얄 패배의 일차적 책임은 루아얄 자신과 사회당에 있다.

〈한겨레〉나 〈가디언〉 같은 중도우파·중도좌파 신문들은 사설에서 사회당과

루아얄이 변화가 필요한 프랑스 사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패배했다고 평가했다. 〈가디언〉은 솔직하게 영국 토니 블레어 식의 ‘개혁’을 일관되게 추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사회당이 집권했을 때 공공 서비스 사유화 등 블레어 식 정책을 추진하고, 이번 선거에서 블레어 식 선거운동 전략을 택한 데 대한 대중의 반감이 진정한 문제였다. ‘중도’의 표를 얻으려면 우경화하라는 주류 언론의 ‘지도’를 따르다 보니 대중의 반감과 실망감이 더 커졌다. 한 병원 노동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는 골수 좌파지만 루아얄은 내가 믿는 것을 대변하지 않는다” 하고 말했다.

그래서 1차 선거에서 급진 좌파에 투표한 많은 사람들이 결선에서 루아얄에게 투표했지만 기꺼운 지지는 아니었다. 선거 기간 내내 LCR의 기관지 〈루주〉에는 과연 사르코지에 항의해 루아얄에게 투표하는 것이 현명한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불붙었다. 1차 투표에서 베이루에게 표를 던진 진보 성향 유권자 상당수도 2차 투표에서 루아얄에게 투표하지 않았다. 베이루에게 투표한 사람의 약 60퍼센트가 진보 성향이었는데도 말이다. 이는 사회당을 불신하는 반사르코지 진보 대중의 표 중 상당수가 베이루로 간 결과였다. 루아얄은 2차 투표에서 그 중 40퍼센트만 얻었고 나머지 20퍼센트는 투표에서 기권했다.

사르코지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프랑스 대중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 2006년 반 CPE 시위

대중의 반사르코지 정서를 모으고 확대할 확실한 초점이 있어야 했다. 특히, 메이데이 시위가 그런 초점 구실을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파 노동조합뿐 아니라 다른 노동조합 지도자들도 반사르코지 행동과 투표 호소를 부담스러워했다.

이런 상황에서 급진 좌파들은 대중의 반사르코지 정서를 대변하려 나름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은 단결하지는 못했다. 물론 급진 좌파가 단결에 성공했다라도 루아얄 지지율이 자동으로 올랐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루아얄이 운동의 압력을 받아 좀더 급진적 태도를 취하도록 유도했을 것이고 좌파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더 유리했을 수 있다. 무엇보다 그것은 장차 급진 좌파들의 반신자유주의 공동 활동에 좋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혼란

LCR을 제외한 급진 좌파 진영은 1차 선거 결과에서 저조한 득표를 한 후 혼란에 빠졌다. 선거운동 기간에 공산당은 사회당과 연합해야 한다는 친사회당파 지도부와 반대파 지도부 사이의 논쟁으로 내홍을 겪었다. 조제 보베는 반사르코지 향의 투표의 수준을 넘어 아예 사회당의 공무니를 쫓았다.

반면 LCR은 루아얄을 비판하면서도 사르코지에 항의해 투표하라고 일관되게 호소했다. 그러나 LCR의 전국위원회는 다른 급진 좌파 조직들과 반사르코지 공동 활동을 거부했다.

이는 매우 아쉬운 일인데, 왜냐하면 LCR은 지금 급진 좌파 재결집을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과 자신감을 가진 유력한 세력이기 때문이다. 또, 사회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 이후 6월 총선을 겨냥해 베이루의 중도 정당뿐 아니라 급진 좌파 진영에도 유혹의 손길을 미치려 하기 때문이다. 급진 좌파 진영을 중도로 견인하려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당의 이런 책략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사르코지의 승리가 가져온 사기저하와 혼란 때문에

“사르코지는 파시스트”라고 외치는 사르코지 당선 항의 시위대

일부 급진 좌파들이 다음 달 총선에서 원래 목표 — 반사르코지·반사회당·반신자유주의 공동 행동 — 를 포기하고 사회당의 제안에 말려드는 것이다.

혹은, 당장 사회당과 연합하지 않더라도 급진 좌파 조직들이 선거에서 서로 단결하기보다 각개 약진할 가능성도 있다. 두 경우 모두 프랑스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사르코지는 부유세의 사실상 폐지, 대기업과 상류층에 대한 감세, 공공 의료 체계 예산 삭감, 공기업 노동자 정리해고,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권 제한 등의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르코지가 이 모든 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프랑스는 파업과 시위로 얼룩지는 시끄러운 한 해가 될 전망이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투쟁을 고무하고 대중의 반신자유주의 정서를 반영할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 싸움에서 사회당 같은 ‘사회적 자유주의’ 정당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루아얄의 공약에서 드러나듯이, 반신자유주의 투쟁에서 사회당 지도부와 연합하는 것은 평범한 사회당 지지자들을 견인하는 데도, 일관된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건설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전에 공공부문 사유화를 진행한 사회당의 ‘복수 좌파’ 정부에 공산당 등이 참가한 우월한 경험을 되돌아 봐야 한다. 다만, 대선 단일후보 선출 실패에서 드러났듯이 이 쟁점이 반신자유주의 급진 좌파 단결을 위한 논의의 시작 자체를 가로막는 문제가 되서는 안 된다.

사르코지의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서 반신자유주의 급진 좌파 진영은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이는 대선 단일후보 선출 실패 이후 중단된 반신자유주의 연대 활동을 강화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장은 6월 총선을 겨냥한 급진 좌파 선거연합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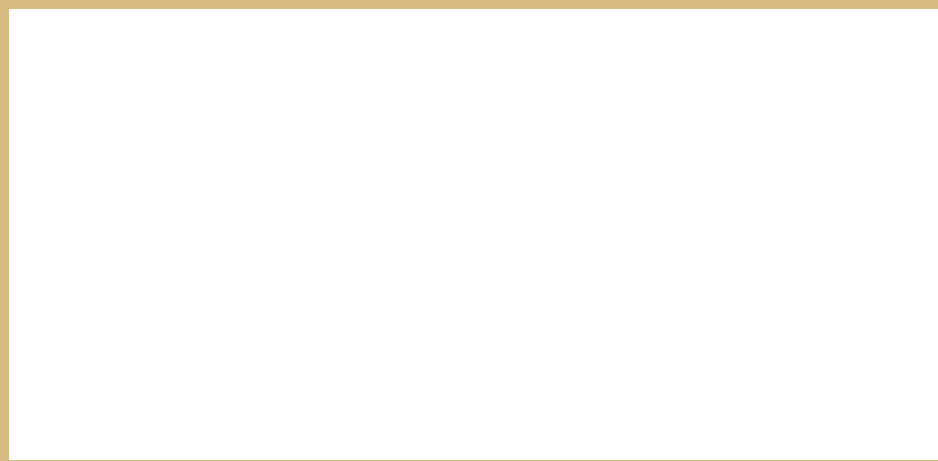
김용욱

신자유주의 유럽연합

5월 7일 한-EU FTA 협상이 시작됐다.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중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맨 델손은 회담 개시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비관세 장벽 철폐”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EU FTA도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선진화”나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공공 서비스를 다국적기업들에게 넘기는 등 “초국적 자본의 놀이터” 만들기 프로젝트를임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한-EU FTA에 반대하는 운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편집자인 **크리스 뱀버리**는 EU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 동력이라고 주장한다.



“한·EU FTA는 한미FTA의 문제점을 확대재생산한다”



유럽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CPE(최초고용계약) 법안에 맞서 승리한 투쟁 등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일련의 저항을 경험했다

차기 총리 내정자인 고든 브라운과 보수당 지도자 데이빗 캐머린은 둘 다 심각한 EU 회의론자들이다. 브라운은 EU가 철저한 규제 완화와 시장 자유화 확대에 실패하자 고졸적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이 우파적 EU 회의론에 질린 일부 노동조합원들과 좌파들은 노동당과 보수당이 옹호하는 자유시장(신자유주의) 정책들의 대안으로 EU를 내세우려 한다.

그러나 연금, 퇴직 연령, 노동권, 부자들을 위한 빈민들의 조세 부담 증대 등을 우려한다면 EU에 대해서도 우려해야 한다. 그것도 아주 많이 우려해야 한다.

영국은 유로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럽 화폐 통합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영국은 여전히 어느 나라가 연금은 가장 적고, 퇴직 연령은 가장 높고, 법인세율은 가장 낮을 것인지를 둘러싸고 다른 EU 회원국들과 경제적 경쟁을 하는 것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EU는 영국의 최대 무역 시장이다.

한편, EU는 미국이나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유럽의 평균소득은 미국보다 30퍼센트 낮지만, 유럽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미국보다 훨씬 더 짧고 생산성이 더 높다.

유럽 전역에서 노동시간 증대, 생산성 제고, 임금 억제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노동법 현대화”에 대한 토론문을 제출했다. 그 핵심은 기존의 고용

보호 조항들을 점차 폐지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노동조합이 획득한 합법적 고용 보호 조항들을 회피하는 개별적·비정규직 계약들이 급증했다.

이것은 흔히 청년 노동자들의 “불안정” 고용이 급증했다는 뜻이다. 그들에게는 상시 고용이나 연금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들은 소득도 더 낮고 휴가도 거의 또는 전혀 누리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집을 사기도 힘들다.

불안정

체코 공화국이 제정한 새 노동법은 산업 증대를 허용하고 고용주들의 채용·해고 권한을 강화했다. EU의 어느 한 국가가 그런 조처들을 도입하면, 다른 국가들도 다 쟁쟁하게 따라한다. 이른바 “바닥을 향한 경쟁”이다.

EU의 각 회원국은 대기업들에게 최상의 이윤 창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 영국에서 진행중인 연금 삭감은 우리의 노후 보장 제도를 점차 무너뜨리려는 EU 각국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의 일부다.

영국은 사유화의 길로 훨씬 더 멀리 나아갔지만, 영국과 경쟁하는 EU 각국도 보건·의료·교육 등의 서비스에 시장을 도입하고 있다. EU는 시장을 위해 창설된 연합이다. EU가 세계화와 앵글로-색슨 형 자유시

장(영미식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최악의 피해에서 유럽의 시민들을 어떻게든 보호한다고 묘사하는 것은 EU가 새로운 신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창출하는 원동력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유럽 시장 창설에서 이득을 얻는 것은 다국적기업들이다. 그들은 EU 회원국들이 가장 낮은 비용과 가장 높은 이윤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그 대가는 사회 기증민들이 치른다.

유럽 전역에서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 노동자들은 더 낮은 임금, 노동조건 악화, 제2차세계대전 뒤 획득한 복지국가(사회보장제도의) 해체를 감수하라는 말을 듣고 있다.

EU의 공동농업정책 덕분에 일부 프랑스 농민들이나 그리스의 올리브 재배농이 거액을 벌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농촌의 소규모 생산자들은 점차 그들을 지배하는 다국적기업들에 밀려 쫓겨나고 있다.

그리고 EU 평균 남녀간 소득 격차는 여전히 15퍼센트다. 심지어 33퍼센트나 되는 나라들도 있다.

EU의 또 다른 피해자는 이주노동자들이다. 그들은 유럽 경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점점 더 엄격해지는 이민법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3월 24일 EU 회원국 정부 수반들은 로마조약 50주년을 기념하려고 베를린에 모일 것이다. 현재 EU 의장국인 독일의 우파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새 조약의 기초가 될 [EU의] “사명과 가치”를 승인하는 선언을 발표할 것이다. 메르켈은 이 선언이 2년 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유럽헌법을 대체하기를 바란다.

유럽헌법을 새 조약으로 대체하면 굳이 국민투표라는 골치 아픈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 결과를 단지 유럽에 대한 거부쯤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유럽 대륙에서는 유럽헌법이 옹호한 신자유주의 모델이 대중에게 거부당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있다.

부결

유럽헌법은 “경쟁이 자유롭고 규제되지 않는 국내 시장”을 약속했다. 유럽헌법이 부결됐지만, EU의 새 회원국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EU 가입[올해 1월 1일] 전에 자국에서 “시장 경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했다.

그리고 유럽헌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유시장 유럽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더한층 빨라지고 있다.

또한, EU는 유럽의 다국적기업들을 위해 남반구를 희생시켜 세계 시장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도 주도했다.

지난주에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 피터 맨

탈슨은 대부분 옛 유럽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 연안의 78개 국에게 그들이 유럽 시장에 주요 농산물을 수출할 때 유리한 조건을 허용하던 협정을 올해 말까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나라들은 EU산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고 서비스를 사유화해서 유럽 기업들이 그런 서비스를 인수하도록 허용해야만 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 되면 현지의 공업과 농업은 파괴될 것이고, 일부 최빈국들의 교육·보건 의료 서비스는 더한층 악화할 것이다.

식민주의

한편, “유럽의 요새화” 때문에 남반구와 유럽 접경 지대가 점차 군사화해서, 유럽의 해군 함정들이 지중해를 순찰하고 리비아에는 감금 수용 시설이 설치됐다.

그 목표는 유럽의 대기업들이 의존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입국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더욱 축소해서 사실상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EU 집행위원장은 아프리카 출신 고급 두뇌 학생들에게 즉시 유럽 시민권을 제공하겠다는 계획

을 발표했다.

남아공의 국회의원 카다르 아스말은 이 계획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두뇌 유출이 아니라 남반구의 지적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고 “교활한 식민주의”이다.

EU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 동력이다. 또한, EU는 매우 비민주적이다. 주요 결정들은 27개 회원국 정부 지도자들의 회의인 유럽이사회에서 비밀리에 내려진다.

우리가 선출한 유럽의회는 유럽이사회 회의 결정들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거부권만을 갖고 있다. 브뤼셀에서 약 1만 5천 명의 “로비스트들”을 고용하고 있는 재계·금융계의 소수 특권층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

유럽 중앙은행은 민주적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유럽 중앙은행의 임무는 오직 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뿐이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으로 유로화 사용 지역의 [공식] 실업률은 무려 10퍼센트나 되게 됐다.

유로화 사용 지역 안에는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공동 한계가 설정돼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국가는 유럽 화폐 통합에서 축출될 수 있다.

비교적 저항이 약할수록 유럽 자본은 더 쉽게 신자유주의 유럽을 건설할 수 있다. [현재의] 약한 저항은 부분적으로 1980년대에 유럽 노동운동이 겪은 패배를 반영한다.

영국에서 사태가 훨씬 심각했지만, 마거릿 대처가 광부 등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덕분에 다른 나라 정부들이 쉽게 그 본보기를 따랐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에게 노동조합원들과 사회운동들이 여전히 충성을 바쳤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제 무덤 파기는 영국에서 절정에 달했지만, 그것은 더 광범한 패턴의 일부였다.

신자유주의에 맞선 저항의 수준은 영국보다 유럽 대륙에서 더 높았다. 그러나 그런 저항은 대체로 하루 파업과 시위로 제한됐고, 저항운동의 지도자들은 양보안이 제시되자마자 이를 열면 받아들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인 우리는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저항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반신자유주의, 국제주의, 반인종차별주의, 반제국주의를 비타협적으로 고수하는 새로운 급진 좌파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영국의 EU 가입에 반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EU가 부자들의 클럽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닥을 향한 경쟁”도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EU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사회복지 수준을 모든 EU 회원국 시민들에게 확대 적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최상의 연금, 가장 많은 최저임금, 가장 짧은 노동시간, 무상교육, 가장 엄격한 환경 규제가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브라운·캐머런·메르켈이나 자르 시라크의 뒤를 이어 프랑스 대통령이 될 후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유럽의 모습이다.

나이지리아 한국인 노동자 납치 사건

제국주의적 석유 쟁탈전이 원인이다



폭력·빈곤·불평등의 암담한 현실이 나이지리아인들을 무장 저항에 나서게 한다

5월 3일 오전 나이지리아 니제르 델타(삼각주) 지역에서 대우건설 노동자 3명이 무장단체에게 납치됐다. 이 지역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납치된 것은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번째다.

나이지리아 산유 시설 밀집 지역인 이곳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납치가 빈번하다. 지난해에 외국인 노동자 80여 명이 납치된 데 이어, 올해는 5개월 동안 벌써 93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납치됐다.

이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납치가 거듭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먼저, 지난 4월 대선 이후 나이지리아의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 독재자 올루세군 오바산조의 3선 개헌이 실패하면서 실시된 나이지리아 대선은 투표함 탈취, 중복 투표, 야당 지지자 투표 방해 등 선거 부정과 폭력으로 얼룩졌다.

나이지리아의 가장 유력한 무장 세력인 니제르델타해방운동(MEND)은 최근 다국적 석유 기업을 겨냥한 공격과 외국인 노동자 납치 등이 “전임 대통령에게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안겨주고, 신임 대통령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나이지리아의 석유, 나아가 아프리카 석유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경쟁이다.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물론이고 한국도 아프리카 지역 진출에 열을 올리며 석유 자원 확보 경쟁 격화에 한몫했다.

특히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4~5년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이슬람 무장조직을 겨냥한 군사 행동을 벌였고, 최근에는 에티오피아의 소말리아 침공을 지원했다.

중국도 아프리카 자원 확보 경쟁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군사적 개입도 함께 추진했다.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의 대아프리카 무기판매액은 러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유엔평화유지군 명목으로 파견한 병력도 대부분 아프리카에 집중돼 있다.

중국 정부는 나이지리아에서도 대규모 석유 개발을 진행하며 독재 정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독재 정부는 제국주의 열강의 지원을 받아 MEND 같은 무장 세력들의 저항을 짓밟고 있다. 최근엔 다국적기업들이 스스로 용병을 고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결국, 니제르 삼각주가 그토록 폭력적인 곳

이 된 일차적 책임은 미국·중국 등의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있다.

나이지리아 대중이 제국주의 국가와 다국적기업의 진출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는 명백하다. 석유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성과가 평범한 나이지리아인들의 삶을 개선시키지는커녕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석유 생산·수출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는 고스란히 다국적기업과 토착 지배계급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

호주머니

‘국제위기그룹’의 보고서 〈나이지리아: 풍요 속의 결핍〉(2006)을 보면, 나이지리아가 석유로 벌어들인 돈의 85퍼센트를 인구의 1퍼센트가 가져간다. 반면, 1960년 15퍼센트였던 나이지리아의 빈곤층은 1993년에 66퍼센트까지 늘어났고, 2003년 조사를 보면 하루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 80퍼센트나 된다.

환경 파괴도 심각하다. 지난 30년 동안 계속된 석유 채굴 과정에서 배출된 매연 때문에 대기가 심각하게 오염됐다. 니제르 삼각주가 속한 바예사 주(州)에서 5천 건의 호흡기 질환과 12만 건의 천식이 보고됐다.

요컨대,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사적 지원과 개입, 다국적기업들의 이윤 탐욕, 토착 지배계급의 부패가 나이지리아와 니제르 삼각주에 만연한 폭력, 빈곤과 불평등, 환경 파괴의 원인이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에 절망한 나이지리아인들이 저항의 일환으로 석유시설 공격이나 외국인 납치 등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다른 제국주의 열강처럼 아프리카, 특히 나이지리아의 석유 자원 확보에 힘써 왔다. 대우건설은 이곳에 진출한 여느 기업들처럼 독재 정권과 유착하고 용병을 고용해 이곳의 불안정에 일조했다.

덕분에 대우건설은 해외부문에서만 1조 7천 2백91억 원의 수주 잔고를 올리며 업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대우건설은 생명까지 위협받는 노동자 납치 사건이 거듭돼도 나이지리아 철수를 고려도 하지 않고 있다.

나이지리아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제국주의 국가와 다국적기업들의 만행이 계속되는 한 무고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토착 무장 세력들의 공격과 납치 위협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명훈

지난 5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4차 기후 변화 보고서 중 3편 “기후 변화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각각 지난 2월과 4월에 발표된 4차 보고서 1편과 2편은 기후 변화의 원인과 심각성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3편은 기후 변화를 멈추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의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구체적 기술들과 정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IPCC는 8년 뒤인 2015년을 정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는 계획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6퍼센트를 차지하는 선진국들의 배출 감소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유 가격 상승 같은 시장의 힘만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없을 것”이라며 이들 선진국 정부들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또, 1970년부터 2004년까지 70퍼센트나 늘어난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에너지 공급 부문(1백45퍼센트 증가)과 수송 부문(1백20퍼센트 증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2030년 기준으로 세계 총생산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재원을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에 투입한다면 이번 세기 말까지 온도 상승폭을 2도 안팎으로 붙들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그러나 IPCC가 최상의 목표로 제시한 계획이 모두 실현되더라도 2050년에는 20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해수면이 18~38센티미터나 상승해 방글라데시 등 저지대에 사는 수억 명이 난민이 될 것이다.〈맞붙〉39호 ‘기후 변화의 최대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들이다’를 보시오)

시장

따라서 이런 난민들을 수용하고 집과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IPCC가 자신들이 지난 2월과 4월에 지적한 바 있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다. 아마도 선진국 정부들의 입김이 큰 영향을 끼친 듯하다.

특히, 교토협약조차 가입하지 않은 미국 정부는 이번에도 보고서 작성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했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핵 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덴마크의 해상 풍력 발전소 — 이런 재생가능 에너지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유력한 대안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핵 발전은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전혀 아니다. 핵 발전은 풍력·조력·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와 달리 우라늄 채취·수송·농축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환경단체인 영국 ‘지구의 벗’은 2004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핵 발전은 “풍력 발전보다 온실가스를 50퍼센트나 더 배출한다”고 지적했다.

또, 체르노빌 핵 발전소 사고가 보여준 끔찍한 위험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다.

무엇보다 핵 발전을 기후 변화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제국주의 열강들과 지역 패권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야욕에 청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는 기후 변화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세계를 끔찍한 위험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미국을 교토협약에 참여시키려면 이런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다른 주요 선진국 정부들의 변명은 군색해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뿐 아니라 영국·러시아·중국·일본·호주·한국 등 다른 선진국 정부들도 최근 핵 발전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다른 선진국 정부들은 교토협약이 시행되기 전부터 끊임없이 미국의 요

구에 타협했다.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배출권 거래제’인데, 이산화탄소 1톤당 배출권에 가격을 매겨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이를 거래할 수 있게 하면 결국 가격 압력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장 논리에 따라 도입됐다.

핵

그러나 지금처럼 이미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양만큼 배출권을 할당해 준다면 최상의 상황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현재대로 유지될 뿐이다.

예컨대 영국 최대 규모의 석탄 발전소인 드랙스 발전소는 현재 매년 5백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데, 영국 정부는 이 발전소에 연간 1천5백만 5천 톤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줬다. 덴마크·아일랜드·스페인·이탈리아 등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배출권을 구입하려는 동기는 적은 반면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 대한 ‘친환경’ 투자로 새로운 배출권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다. 따라서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느낄 만한 가격 ‘압력’은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듯하다.

그 결과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이산화탄소 1톤당 가격은 2004년 1월 12유로에서 2006년에는 1유로로 떨어졌다.

2050년까지 최소한 지금보다 50~80퍼센트를 줄여야 온도 상승을 2도 안팎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조언에 비춰보면 배출권 거래제는 사실상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해결책’인 것이다.

결국 이런 배출권 거래제를 바탕으로 한 IPCC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도 근본적 결함을 안고 있다. IPCC는 이산화탄소 1톤당 가격이 1백 달러인 경우 매년 16~31기가톤씩 배출을 줄일 수 있고 그리 되면 수십 년 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가격이 2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매년 5~7기가톤밖에 줄일 수 없다고 한다. 현재 가격을 고려하면 IPCC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에 의존하는 식의 대안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되레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바이오 에너지(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등)처럼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를 도입하는 일조차 시장에서 조절되도록 내버려둔다면, 지금처럼 카길 같은 대기업들이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방대한 산림을 파괴하고 플랜테이션 농장을 만들어 농민들을 토지에서 몰아내는 일들을 막지 못한다. 심지어 미국에서 멕시코로 수출하던 옥수수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바람에 멕시코에서는 주식인 포르피야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다.

따라서 IPCC가 전 세계 GDP의 3퍼센트만 투자하면 최악의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한 것은 분명 고무적인 사실이지만 이는 시장에 대한 약간 불확실한 기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효과’보다 인류 전체의 미래를 우선 순위로 삼는다면, 다시 말해 기후 변화를 멈추기 위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과 수송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급속히 이루려면 분명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군비를 축소하고 화석연료 기업과 핵 발전에 투자되는 보조금을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과 수송 체계 개편에 투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또, 화석연료 기업들에 환경세를 부과하고 선진국 정부와 기업들이 가진 기술들을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국가에 무상으로 전해 준다면 그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

무엇보다 IPCC가 앞선 보고서에서 지적한 어마어마한 미래의 위험을 고려한다면 이런 투자는 핵 개발이나 석유 기업들과 자동차 기업들의 이익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다.

모순과 소심함으로 가득 찬 유엔의 기후 변화 대책조차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미국 정부와 이를 핑계 삼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주요 선진국 정부들, 그리고 이윤을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뛰어들 각오가 돼 있는 석유·자동차 산업복합체들의 저항을 고려하면, 기후 변화를 멈추기 위한 진정한 대안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줄 힘이 필요하다. 세계 곳곳에서 시작된 기후 변화 행동이 더 강력해져야 하는 까닭이다.

장호중

“정규직 · 비정규직이 함께 싸우는 게 중요해요”

르네상스호텔노조 이옥순 위원장(오른쪽)과 함소란 사무국장(왼쪽)

오는 7월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벌써 비정규직 무더기 계약해지, 초단기 계약 등 우려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메이데이 집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현실을 절절하게 호소한 르네상스호텔 노동자들(이옥순 위원장, 함소란 사무국장)을 만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와 투쟁에 대해 들었다.

르네상스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을 간
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옥순 위원장 : 2001년 11월쯤 갑자기 호텔이 “망한다”는 얘기가 나돌더니, 바로 ‘아웃소싱’(외주화)이라는 얘기가 나오더군요.

[사측은] 처음에는 “외주화돼도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정년 지나고도 더 오래 일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싸인했다. 너만 안 했다”, “몸뚱아리만 갖고 쫓겨나는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공갈 · 회유 · 협박에 못 이겨, 저도 결국 12월에 싸인을 했어요. 사정이 워낙 억울하고 분해서 노조를 만들기로 했어요. 5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사측의 감시 때문에 처음에는 비밀리에 움직였어요. 그런데 2~3개월 못 가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 파업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비정규직으로 바뀐 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함소란 사무국장 : 우리가 원래 연봉이 3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이 되니까 해마다 떨어지더라고요. 보너스 같은 건 일절 없고, 월급이 진짜 3분의 1이 됐어요, 연봉 1천2백만 원.

정규직 때는 휴가도 많잖아요, 연차니 월차니. 그런데 비정규직이 되니까 휴가도 확 줄었어요. 그래도 몸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쉬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휴가가 얼마 없으니까 그걸 일당으로 까는 거예요. 하루에 거의 4만 원 넘게요.

평소에 농담도 주고받고 그랬던 동료들도 어느날 갑자기 비정규직이 되고 나니까 말도 잘 안하고 말을 붙여도 시큰둥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도 서운하고 가슴 아프죠.

상사들도 무슨 일 있을 때는 전부 교육시키고 지시하면서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너희는 우리하고 상관 없다. 너희는 용역 직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비정규직 악법의 시행을 앞두고 벌써 비정규직 무더기 해고, 초단기 계약 등 우려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옥순 위원장 : 저는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해 봤어요. 해고까지 당했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억울한지 잘 알아요. 제가 이렇게 싸우는 것도 나 같은 경우 더 생기지 말라고 싸우는 거죠.

지금도 비정규직이 많고 힘든데, 이렇게 개악되면 지금 1백만 원 받는 일자리가 70만 원 짜리, 50만 원 짜리 안 되라는 보장이 없어요.

저출산이다 뭐다 하는데, 사실 지금 같아서는 노동자들에게 결혼 · 시집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애도 낳지 말고요. 이젠 뭐 미래가 있나 ….

지금 시행령 실시되기 전에도 계속 계약해지가 되고 있는데, 이젠 뭐 비정규직 보호는커녕 10년 동안 일하던 노동자들까지 모두 내쫓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정말 정규직이 ‘회귀종’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비정규직법 시행령 발효된다는 시점에, [투쟁으로 막아낸] 좋은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감싸 안지 않으면 머지않아 남아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산별노조도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라가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노동자들이 단결하면 막아낼 수 있다고 믿어요.

인터뷰 · 정리 김용민



2005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처음으로 50퍼센트를 넘었다. 물론 가정에 갇혀 사는 것보다는 낫지만 한국에서 여성으로 일하는 것은 적잖이 괴로운 일이다.

70퍼센트가 비정규직인 여성 노동자들에게 노무현 정부 4년은 절망의 세월이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계속 증가했다.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악법이 통과되기 훨씬 전부터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들을 서둘러 해고했고, 기간을 적지 않는 ‘0개월’ 근로계약서까지 등장했다. 얼마 전 정부가 타결한 한미FTA로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고착화할 무기계약직을 도입하고 외주화를 확대하려 한다.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63.2퍼센트가 여성이다.

‘노동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언을 들어보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차 심부름은 물론이고 화장실 청소에도 공무원과 상담원 책상까지 닦아야 했으며, 해고될까 봐 육아휴직은 꿈꿀 수도 없다. 어느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기가 어느 소속인 줄도 모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민원상담 · 민원접수를 하고 있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당연한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 취업자의 절반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 일한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에서도 대부분 배제된 여성 노동자들에게 생리휴가를 당당하게 쓰는 건 꿈 같은 일이다. 게다가 2003년 정부는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만들어 버렸다.

OECD의 ‘2006년 사회 통계’에서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하다. 50개 대기업의 남녀 임금격차는 2000년 이후 5년 간 무려 50퍼센트나 확대됐다.

정규직 남성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 여성 임금은 42에 불과하다.

병든

여성 취업률은 보통 출산을 하는 30대에 가장 저조한 M자형 그래프를 그리는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고 회사의 압력으로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성들이 가정 내 무급 봉사자 취급을 당하는 한 저임금과 취업 장벽 등 차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보육, 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가사노동 해방’을 말하며 정부가 내놓은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이다.

그러나 복지를 기업의 이윤 경쟁에 맡기는 정책은 노동자 가족에게 안정되고 질 좋은 복지 서비스를 보장하지 못한다. 사회서비스직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강요받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여성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몰았지만 이에 맞서는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직 악법 통과 이후 하루아침에 대거 해고된 학교 비정규직들이 싸우고 있고,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한 울산과학대 여성 노동자들이 야만적인 탄압에도 계속 저항하고 있다.

정규직 남성 승무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파견직으로 일한 KTX 여승무원들도 1년 넘게 싸우고 있다. 이 투쟁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외주화 · 대량 해고 ·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공기업에 인센티브까지 쥐 가며 장려하는 외주화는 사기업 노동자들과 남성 노동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여성 노동권은 전체 노동자들의 삶과 연결돼 있다. 노동에서 성차별을 끝내는 것은 이 병든 사회를 바꾸기 위한 투쟁의 일부다. 여성 노동자들과 남성 노동자들의 단결이 중요한 까닭이다.

승주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동자와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부시의 오만한 거부권 행사를 먼저 비판해야

〈맞불〉 42호 “안정은커녕 재앙만 키운 이라크 ‘증파’” 기사에서 김용민 기자는 미국의 반전 여론 압력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한 ‘철군법’의 약점을 잘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의 온건한 ‘철군법’조차 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부시의 뻔뻔함을 먼저 비판해야 하지 않았을까? 부시는 5월 1일 “철군 시한을 정하는 것은 패배의 날짜를 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민주당의

‘철군법’조차 단호히 거부했다. 우리가 “각종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민주당의 ‘철군법’을 지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부시의 거부권 공언은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철군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70퍼센트의 반전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시가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히는 동안 백악관 밖에서는 반전 시

위대가 “전쟁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군의 조속한 철군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전 여론은 온건하고 불충분한 민주당의 ‘철군법’보다 이조차 허용하지 못하는 오만한 부시에 더 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반전 여론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약점을 먼저 폭로하기보다는 위기에 빠진 부시의 오만한 발악을 먼저 비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주현

42호 이주노동자 기사를 읽고

메이데이를 며칠 앞두고 정부는 5년 이상 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주노동자들 중 일부는 큰 기대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늘 그랬듯 정부가 발표한 내용

은 통장잔고 3천만 원 이상, 월수입 1백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기만 정책이다. 이 때문에 이주노조는 메이데이 집회와 전야제 등에서 리플릿과 발언을

투쟁 소식

기아차 비정규직 전면 파업 소식

지난 5월 3일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지회는 사측의 25명 정리해고와 분사 계획에 맞서 주야 파업 투쟁을 힘차게 전개했다. 이날 파업으로 사측은 수천 대의 생산 손해를 보았다. 파업으로 1공장과 3공장의 라인인 중단됐고, 기아 사측은 공장장 담화문을 통해 ‘불법파업 엄단’ 운 운하며 여전히 협박만 하고 있다.

지회와 맺은 단체협약 파기를 배후 조종하고 고용안정협의서도 휴지조각으로 만든 기아 사측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비정규직 지회 탄압뿐 아니라 정규직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기아 사측은 차가 팔리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5월 3일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 파업

잔업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기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지회 탄압이 곧 정규직 노동자 탄압의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연대 투쟁을 벌여야 한다. 안타깝게도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1단사 1조직’ 편제라는 조직 형식 논의에 치중하느라 비정규직 지회와 연대 투쟁 건설을 소홀히 하고 있다.

물론 산별 정신에 입각해 한 작업장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조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형식만 통일한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연대를 위해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다. 이러한 싸움 속에서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날 파업 과정에서 기아차 ‘현장 공동투쟁’ 소속 정규직 활동가 30여명은 사측의 침탈과 대체인력 투입에 대비하며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했다. 기아차 활동가들은 계속 이어질 비정규직 파업에서 공동 투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 투쟁은 6월 급속노조 파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우용(기아차 소속 급속노조 대의원)

지역 사회 포럼

인천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있는가?
5월 11일(금) 오후 7시 30분
연사: 김용욱(주간 <맞불> 기자)
장소: 한국토지공사 인천본부 4층 교육실
문의: 010-3083-5508

서울 남부
자유무역의 신화와 현실 - 대안은 무엇인가?
5월 16일(수) 오후 8시
연사: 강동훈(주간 <맞불> 기자)
장소: 방배1동주민자치센터 3층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6495-9925

서울 동부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인가?
5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
연사: 이정구(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장소: 동부여성플라자 2층 세미나실(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018-330-4624

서울 중부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5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연사: 안준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 부장)
장소: 명동 향린교회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647-3309

서울 서부
국민연금 개혁의 진실 - 누가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가?
5월 23일(수) 오후 7시 45분
연사: 장호중(주간 <맞불> 기자)
장소: 아트레온토즈(신촌역 4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문의: 017-267-0400

청소년다함께 포럼
3월 정책을 넘어 입시 폐지로
5월 12일(토) 오후 3시
연사: 이형빈(이화여고 교사)
장소: 청소년 문화교류센터 미지(명동역 10번 출구)
문의: 016-463-4844

대학 맑스주의 포럼

이화여대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있는가?
일시: 5월 16일(수) 6시 30분
문의: 010-6890-8796

성균관대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연사: 장호중(주간 <맞불> 기자)
일시: 5월 16일(수) 6시 30분
문의: 010-6421-4017

서울시립대
1987년 20주년 - 민주주의 시계는 어디쯤 왔는가?
연사: 한규한(주간 <맞불> 기자)
일시: 5월 16일(수) 7시
장소: 건설공학관 206호
문의: 011-9347-1075

한국외대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연사: 장호중(주간 <맞불> 기자)
일시: 5월 17일(목) 6시 30분
문의: 010-4670-1392

‘미래구상’에 대한 경직된 태도를 경계해야

한규한 기자가 쓴 “암울한 미래에 발을 들이려는 미래구상”(〈맞불〉 41호) 기사는 범여권 개혁세력의 결집을 도모하고 싶어하는 ‘미래구상’ 일부의 위험한 행보를 잘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한규한 기자는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미래구상’과 선거연합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지 않는다.

한규한 기자는 ‘미래구상’ 비판에 기사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그리고는 기사 끝부분에 이렇게 한 문장을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미래구상’의 모순을 비판하며 이들이 진정한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실컷 ‘미래구상’의 위험성을 드러내 비판해 놓고는 민주노동당이 ‘미래구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 선거연합을 해야 한다고 하니 독자로

서는 ‘미래구상’이 선거연합 논의의 대상이라는 것인지 아닌지가 헛갈린다.

민주노동당이 ‘미래구상’과 선거연합 논의를 해야 하는 까닭은 ‘미래구상’이 상징하는 개혁 염원 대중을 사이비 개혁 세력이 아니라 진보진영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미래구상’의 일부 계획을 문제 삼아 선거연합 논의 자체에 소극적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지금은 정치적 역동성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한 예로, 한미FTA 반대 운동의 부양력 때문에 천정배 같은 기성 정치인들조차 한미FTA 반대 운동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만약 한미FTA 반대 운동으로 천정배 등이 왼쪽으로 더 이동한다면 열우당 왼쪽에서 방황하는 대중의

정치적 대표로 떠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듯 정치적으로 유동적인 상황에서 천정배 등을 “립스틱 바른 돼지”일 뿐이라고 간단히 치부한다거나 ‘미래구상’을 “립스틱”에 비유하는 것은 가변적인 상황에 따른 전술적인 고려를 배제한 경직된 태도다.

선거연합을 위해 열우당 이탈 세력에 대한 비판을 삼가서는 안 되겠지만, 변화가능성을 차단한 채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도 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한규한 기자의 글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거의 없다. 그러나 열우당 이탈 세력을 폭로하고 ‘미래구상’을 경계하는 것 외에 선거연합 논의를 고무하기 위한 전술과 행동 지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규한 기자의 글을 읽은 독자들 중 상당수가 “오른쪽으로 이동”중인 ‘미래구상’과 선거연합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물음을 던졌던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민주노동당 지도부에게 우선 주문해야 할 사항은 “‘미래구상’의 선거연합 구상을 추수하다가 함께 수렁에 빠지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경고라기보다는 ‘미래구상’에 대한 당 일각의 종파적 태도에 발목 잡혀 선거연합 논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돼야 하지 않을까.

단식 중인 천정배를 방문한 민주노동당 의원단

전주현

천정배 거론은 부적절했다

김인식 동지는 〈맞불〉 40호에서 기존 제도정치권 세력들과 연합이 ‘진보진영 단일후보’와는 다르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또, “정치 양극화로 붕괴 상태인 범여권 세력을 진보진영이 애써 되살려 놓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범여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영향력을 더 약화시켜 완전한 붕괴를 재촉하는 것이 진보진영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이다. 그러려면 진정한 진보 세력이 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42호에서 “천정배 등이 향후 사태 전개 과정에서 어느 방향을 향하게 될지 예의주시할 필요

가 있다” 하고 ‘긍정적 검토’와 ‘기대’가 느껴지게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김인식 동지의 주장처럼 한미FTA 반대 운동에 근거해 ‘진보진영 재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그것이 곧 온건화 압력 수용을 뜻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 운동의 많은 세력으로부터 여전히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고, 비록 열우당을 탈당했지만 노무현의 오른팔로서 노동자·민중을 탄압했던 천정배조차 ‘진보진영’으로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것은 온건화 압력 수용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다.

천정배는 한때 열우당 원내대표를 지냈으며, 2003년도 파병연장안, 2004년 초 자이툰 부대 파병, 2004년 연말 파병연장안, 2005년도 파병연장안, 2004년 한·칠레FTA, 2004년 공무원 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2006년 파견법·기간제법 등을 모두 찬성한 인물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론스타와 삼성 X파일 수사를 덮고, 펭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운동과 이주노동자 운동을 탄압한 장본인이다.

그가 한미FTA 반대 운동의 성장으로 잠시 운동의 일부가 된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굳이 〈맞불〉에서 천정배를 거론한 것은, 설령 그에 대한 조금의 지지도 표현하지 않았고 비판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함께 했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언급이었다.

류민희

우리은행 ‘정규직 전환’ 이후

MBC라디오에 김미화 씨가 진행하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다.

메이데이 전날 저녁, 이 프로그램에서 내게 연락이 왔다. 지난 3월 1일 ‘정규직’ 전환된 우리은행 노동자를 인터뷰하고 싶는데 소개를 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은행 모델에 대한 사회적 찬

반 논쟁도 있는 상황에서, 마침 노동절을 맞아 지난 3월 전환 이후 달라진 풍경을 직접 당사자들에게 들어보고 싶다는 의도였다.

인터뷰할 사람들을 섭외해 봤지만, ‘정규직’이라던 우리은행 전환 직원들은 한결같이 ‘신분 노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인터뷰는 가명

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섭외가 안됐다.

사용자의 보복이 두려워 자신의 생활과 노동조건을 있는 그대로 몇 분 인터뷰하는 것조차 기피하는 이 노동자들은 최근 2백 퍼센트 성과급 배분에서도 배제됐다.

그들은 이제 무기계약직도 결국은 ‘계약직’이라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김문성
(금융노조 비정규직 지부 활동가)

개방성에도 한계는 있어야

〈맞불〉 42호에 김인식 동지가 쓴 ‘운동 속에서 선거연합을 건설하기’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진보진영 결집체가 왜 한미FTA 반대 운동 속에서 건설돼야 하는지 지적했다.

또, 좌파가 대중운동 속에서 선거연합을 건설할 때 분명하고 단호한 정치적 태도만큼 개방적인 태도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인식 동지는 광범한 선거연합에서 ‘광범한’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미래구상’을 넘어 지배계급의 일부인 천정배·김근태 등도 선거연합에 끌어들이 수 있다는 부적절한 주장을 했다.

이것은 지배계급과 노동계급의 연합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물론 ‘미래구상’은 열우당이 아니다. 김인식 동지의 말처럼 “범여권 ‘개혁파’의 결집을 희망할지라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맞불〉 41호에서 한규한 동지가 주장했듯이 “‘미래구상’의 선거연합 구상(수구·양극화 세력 반대, 범여권 개혁파 끌어들이기 등)을 추수하다가 함께 수렁에 빠지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미래구상’을 진보진영 선거연합 테이블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범여권 개혁파와 민주노동당 사이에서 동요하는 NGO들과 진정한 개혁을 염원하는 대중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범여권 개혁파들의 혼란, 우유부단, 분열 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이 때문에 ‘미래구상’의 범여권 개혁파에 대한 구애는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노동당이 ‘미래구상’

최영준

천정배를 주시하지는 얘기는 과하다

〈맞불〉 40호와 42호 사이에 어떠한 큰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선거연합이 중요하다고 해도 — ‘미래구상’에서 특히 천정배에 대한 환상(?)이 있다고 해도 — ‘다함께’가 먼저 나서서 천정배를 예의주시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과하다는 느낌이다.

천정배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인 지배계급의 일원이다.

‘다함께’가 아무리 천정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를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사를 읽은 독자들이 어떤 생각의 나래를 펼칠지 걱정이다.

천정배에 대한 “순수주의적 태도를 버리”라고 한다면 〈맞불〉 독자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김태현

한미FTA 저지 금속노조 파업

실질적인 파업을 건설하자

정중남

한미FTA 반대 운동의 열기와 성과가 이어진 올해 메이데이 집회는 지난해보다 활기 차고, 노동자들의 투지도 높았다. 이미 투쟁중이거나 싸움을 예고한 비정규·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6월 총파업을 결의한 금속노동자들의 행진 대열이 특히 두드러졌다.

미온적 지도부를 압박해 파업 계획을 통과시킨 금속노동자들의 자신감은 대회 전체 분위기를 왼쪽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총파업을 결정한 금속노조 동지들이 자랑스럽다”며, “공공운수연맹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한미FTA 저지 투쟁에 나서자”고 호소한 공공노조 현정희 부위원장의 발언도 이런 분위기를 대변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6월 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생산을 마비시키는 파업이야말로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할 가장 효과적인 무기다.

지난해 프랑스의 청년·학생과 노동자들은 프랑스판 비정규 악법인 최고고용계약법(CPE)에 맞서 전국을 휩쓴 거대한 파업과 대중투쟁을 벌였고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싸워야 한다.

정부와 언론의 대대적인 거짓말 공세 속에서도 한미FTA 반대 여론이 30퍼센트 수준인 것도 투쟁하기 좋은 조건이다.

산별교섭 시기인 6월에 대규모 투쟁을 조직하면 산별노조의 교섭력도 커질 것이다. 이 때는 비정규·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물론,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가 예정한 집중투쟁 시기와도 겹친다. 이 시기에 서로 따로따로 투쟁할 것이 아니라, 일정과 내용을 조율해서 다 함께 힘을 모아 싸운다면 그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노동절 대회에 참가한 금속 노동자들

효과는 갑절로 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집중투쟁

메이데이 날 “6월에 80만 모두가 참가하는 강력한 투쟁을 준비” 하겠다면 이석행 위원장은 이튿날에는 “투쟁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며 “과거하고 다르게, 파업을 잡아 놓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정갑득 지도부가 장기투쟁 사업장의 상징인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을 부적절한 합의로 마무리한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 다른 장기투쟁 사업장인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지회는 “고립되고 탈진한 동지들에게 합의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일부 좌파들이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투쟁을 압살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지금 비정규직 투쟁을 억압하

는 것은 정권과 자본이지 우리 운동의 지도부가 아니다. 지도부의 잘못된 대응은 비판해야 하지만, 지도부와 조합원을 구분하지 않고 ‘금속노조’라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도 옳지 않다.

금속노조 안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와 한미FTA 반대 파업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현장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인 6월 파업이 되려면 지금부터 현장에서 착실히 파업을 건설해야 한다. 금속노조 활동가들은 강연회·토론회와 리플릿 배포 등의 효과적인 선전·선동을 하며 현장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

한미FTA의 직접적 피해자가 될 거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공공연맹의 현장 활동가들도 파업을 건설하려는 활동에 나서야 한다. 한미FTA의 본질을 폭로하며, 파업의 필요성을 선전·선동해야 한다. 파업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현장 활동가들은 지금부터 효과적인 6월 파업을 성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난해 프랑스처럼 청년·학생과 노동자들이 동참하는 전국적인 파업과 항쟁의 6월을 조직하자.

미국노총 활동가 제프 보그트 인터뷰

“한미FTA로 한국과 미국 노동자들 모두 피해를 볼 것”

5월 1일 대학로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는 미국노총(AFL-CIO) 활동가들이 나와 한미FTA에 반대해 싸우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에게 연대 연설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들은 다음 날 민주노총이 주최한 “나프타와 한미FTA,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워크숍에서 “한미FTA로 한국과 미국 노동자들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프 보그트(Jeff Vogt) 미국노총 국제경제정책 전문위원은 <맞불>과 전화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의 노동자들이 한미FTA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소수를 부유하게 하면서 노동자의 일자리와 수입을 감소시켰다. NAFTA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은 자유무역협정(FTA)이 어느 나라든지 노동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NAFTA의 주된 결과는 다국적기업의 영향력과 교섭력을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 규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면서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강화한 것이다.

“우리는 한미FTA로 미국에서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국적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것이다.”

한국의 금속노조가 한미FTA에 맞서 6월에 파업을 벌이고 민주노총도 한미FTA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알려주자, “미국노총도 미국 곳곳의 노동자들을 만나며 한미FTA가 불려올 재앙적인 결과를 알리고 의회에서 비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인터뷰 정리 강동훈·조명훈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하십시오

□ 6개월 / 2만5천 원
(신문값 20,000원 + 우송료 5,000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0,000원 + 우송료 10,000원)

신문 종면으로 정기구독 요금이 다소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정기구독자는 구독 기간 만료일까지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